

#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원이 되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1955년 9월 19일 민주당의 시작부터 늘 당원 여러분이 함께하셨습니다.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지켜냈을 때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냈을 때에도,  
민주당은 당원의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갔습니다.

민주당이 당원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여러분이 민주당의 역사를 지켜오셨습니다.

민주당이 당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미래 정당, 유능하고 강한 정당,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으로 당원께 보답하겠습니다.

공정과 생명, 포용과 번영, 평화의 가치를 한반도에 뿌리내리겠습니다.  
민생 우선이라는 책임정당의 모습으로 국민 곁을 지키겠습니다.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지와 응원, 질책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다시 한 번 당원 가입을 감사드립니다.

2022. 10. 25.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 당원 소개

## 당원이란?

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 당원의 구분

- ✓ **지역당원** : 시도당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당원
- ✓ **권리당원** : 당규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
- ✓ **권리당원 선거인단** : 권리당원 중 공직 및 당직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당원

권리당원 중 선거일(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한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는 당직 또는 공직을 위한 경선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 당원의 의무

- ✓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른 의무
- ✓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 ✓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 ✓ 윤리규범을 지킬 의무
- ✓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 ✓ 당규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 당원의 권리와 포상

## 당원의 권리

- ✓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 ✓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에 대해 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 당의 정책 입안이나 당헌·당규 개정 사항에 대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 ✓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 특정 사안에 대해 토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당원에 대한 포상

당의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게 크다고 인정되는 당원 또는 당 외 인사 및 유관기관과 기구에 대하여 그 공적을 심사하여 포상할 수 있음

### 포상기준

-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의 발전과 정강·정책 실현 및 민생 안정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회적 귀감이 되는 행위로 당의 위신과 명예를 고양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윤리심판원이 심의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공로
  - 포상종류 : 1급 포상(당대표), 2급 포상(당대표, 시도당위원장 등) 등
  - 최근 포상 사례 : 20대 대선 기여 특별 공로 포상, 96주년 창당기념 포상 등

※ 포상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에서 가산점(10~25% 범위 내)을 부여함

# 당원에 대한 징계



## 당원에 대한 징계

징계의 종류 |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 당원 또는 당직자 징계사유

-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 당헌 제84조에 따라 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해당하는 경우

###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 징계사유 추가사항

-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 자신 또는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 보좌진 채용
-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급여 환수·후원금 등 부당 금전 수수
- 이해충돌방지 및 회피의무 불이행
- 기타 공무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

### 최근 징계 사례

- 선거 시기 타당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 성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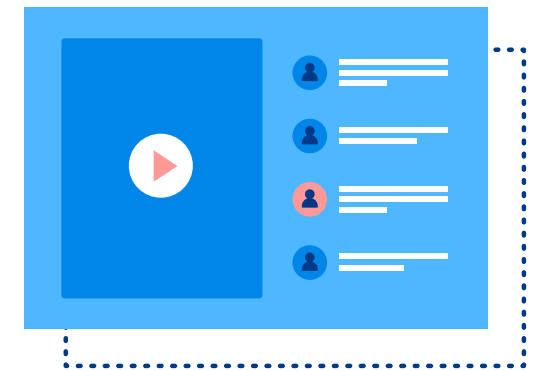
※ 징계를 받은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및 심사에서 그 정도에 따라 감산(25% 또는 15%)함



# 당원 교육훈련

## 당원 교육훈련

당원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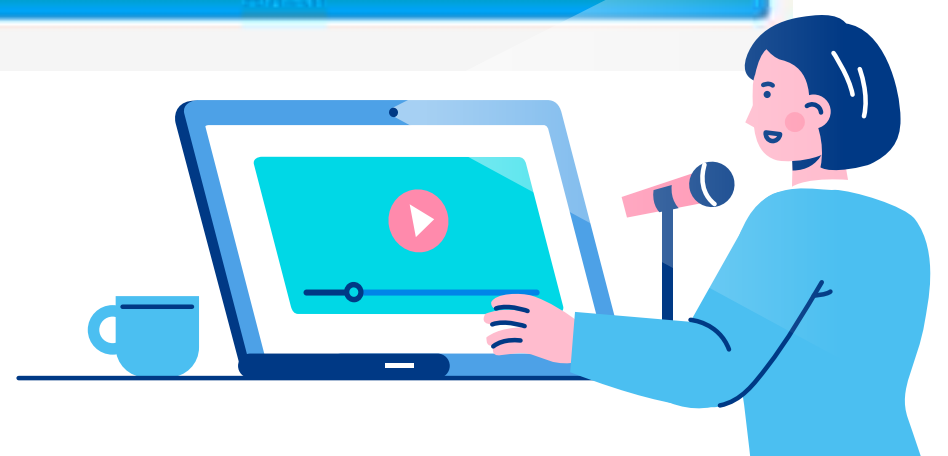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평등교육을 포함하여 당내 교육연수를 16시간 이상 이수해야함

**어디서?** | 중앙당, 해당 시·도당, 해당 지역위원회  
온라인 사이트(당 홈페이지 : <https://theminjoo.kr>)

**어떤 교육을?** | 당 역사 및 정강정책, 윤리규범, 성평등 교육(필수), 장애 인권 교육, 정치관계법, 지방의원 길라잡이, 정책법안 길라잡이, 당원 교과서 등 다양한 교육이 준비되어 있음



다양한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당비 관련

## 당비의 종류

### 1. 일반당비

- 권리당원이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 월 1천 원 이상부터 약정 가능

### 2. 직책당비

-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가 직책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당비
- 월 2천 원 이상 직책별 차등 책정

예시 전국대의원 5천원, 지역대의원 2천원, 기초단체장·광역시도의회의장 50만원,  
광역의회의원·기초의회의장 20만원, 기초의회의원 10만원  
※ 5개월 이상 미납시 당직자격 정지, 1년 이상 미납시 당직자격 박탈(공직선거후보자 신청자격 박탈)

## 당비납부 방법



휴대전화  
소액결제

- 본인 또는 직계가족, 배우자 명의 휴대전화로 결제 설정, 납부일 매월 15일
- SKT, KT, LGU, LG헬로모바일만 등록 가능
- 휴대전화 소액결제 미신청시 결제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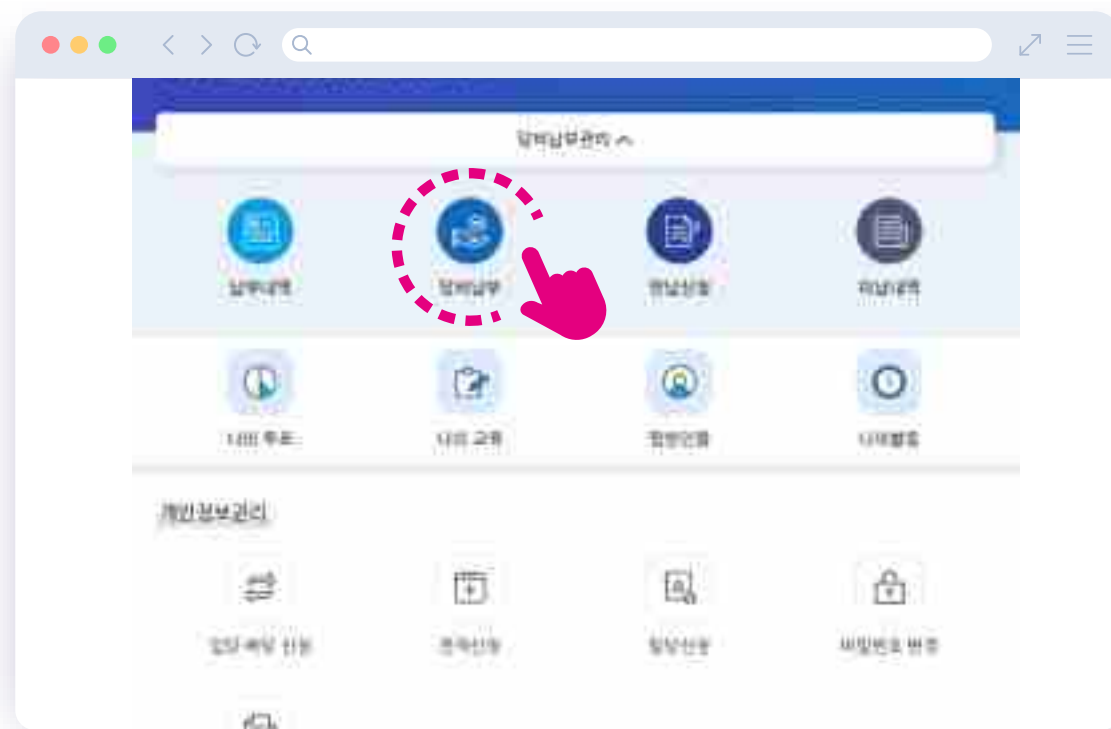


CMS(은행계좌)  
자동이체

- 본인 또는 직계가족,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자동이체 설정, 납부일 매월 25일
- 카카오뱅크, K뱅크 등록가능.휴대전화 번호로 구성된 평생계좌는 등록 불가
- 당비 납부내역 확인 : 당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납부내역 확인 가능

# 당비 관련

## 당비와 더불어 내 정보 확인 및 수정하기



### 당비 납부 및 정보 확인 및 수정가능한 마이페이지 기능 알아보기

- ①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클릭
- ② 상단 이름 밑, **당비납부관리** 탭 클릭
- ③ 당비와 관련된 정보 확인 및 납부 가능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및 수정 가능한 메뉴

당비 납부내역확인 및 납부 방식 변경, 미납내역 조회  
**당원정보 (전화번호 및 주소) 수정, 비밀번호 변경**  
입당·복당신청, 전직신청, 탈당신청  
나의투표, 나의교육, 짬한인물, 나의활동,

## 당비대납금지



법령(정당법 제31조)에 의해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음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경우 **당원자격이 정지됨**  
(당직 직위해제 이상의 징계,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심사에서 배제 등 취할 수 있음)

입당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면 당비 납부 가능 (당규 제2호 제47조 제2항)



# 복당절차 및 전적

## 탈당 이후 복당절차

### 복당 심사 절차



### 탈당 당시의 시·도당에 복당원서 제출

- 예외적인 경우만 중앙당에 신청 : 당의 요구에 의한 복당, 시·도당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시·도당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 (당규 제2호 제17조 제6항)
- 신청 접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아니하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봄 (당규 제2호 제14조 2항)

### 복당불허 사유

-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단,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할 수 있음)
- 제명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단,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할 수 있음)

### 영구복당 금지 (당헌 제4조 3항)

- 성범죄로 인해 제명된 자
- 공직선거 출마 신청한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불복, 탈당하여 출마한 자

## 전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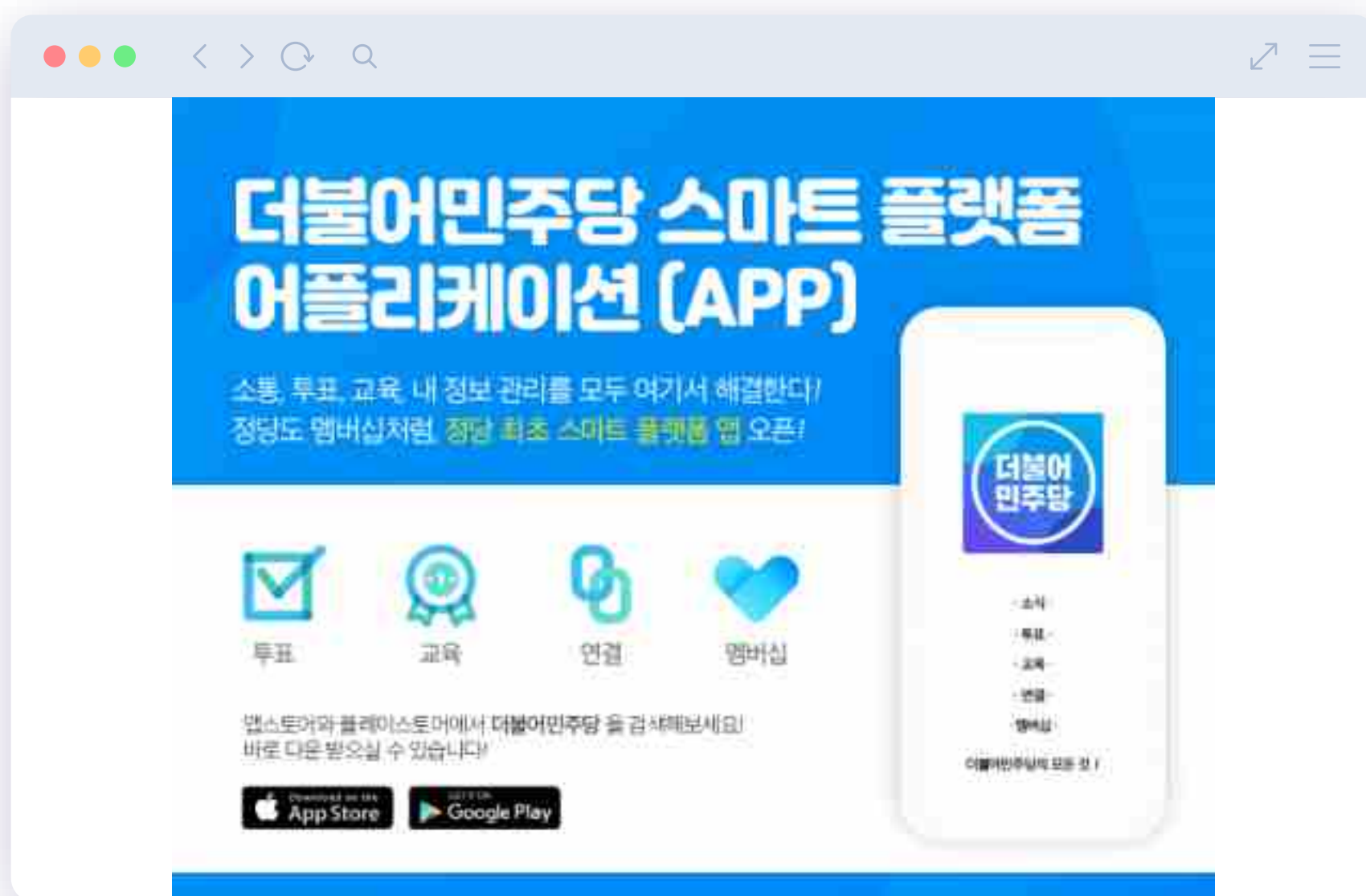
- 당원이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주소 이전 등) 소속 시도당에 전적원을 제출하여야 함
- 전적원 제출은 방문, 우편, FAX, 온라인(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



# 더불어민주당 앱 및 멤버십 가입

## 민주당 앱 (스마트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https://theminjoo.kr/>) 접속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음
- ✓ 당비납부확인, 주소와 휴대번호 변경, 온라인 당원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 특히, 멤버십 가입시 다양한 온라인 당원교육을 수강할 수 있음
  -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성평등교육을 포함하여 당내 교육연수를 16시간 이상 이수해야함
  -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 및 당직자는 성평등교육을 매년 1회 의무 이수해야함



# 더불어민주당 강령

## 강 령

우리는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를 핵심가치로 삼아  
'내 삶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 첫째,

특권과 차별, 불평등 없이 모든 사람이 기회를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한다.

### 둘째,

모든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감염병,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를 실현한다

### 셋째,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며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포용 사회를 실현한다

### 넷째,

혁신과 성장을 통해 국민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번영하는 나라를 지향한다.

### 다섯째,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를 지향한다.

# 더불어민주당 소개

## 경제

포용경제 기반 구축, 혁신성장 강화,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사람중심의 일자리 경제 실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토지의 공공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 사회적 경제 성장기반 조성 and 지역공동체 발전, 농수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조세정의와 재정민주주의 구축

## 일자리·노동

모두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적정임금 보자오가 안정적 노동환경 구축, 참여·존중·소통의 직장 민주주의 실현,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노동기본권 강화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 정치

정치적 다원주의 구현, 시민중심 민주주의 실현, 의회민주주의 강화, 권력기관의 개혁, 공직사회의 혁신, 당내 민주주의 강화

## 자치분권·균형발전

자치분권을 통한 주민자치 강화, 국가균형발전으로 국토의 다양성 실현,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보장기반 강화, 지역산업 발전 및 혁신역량 강화, 광역 협력체계 강화

# 더불어민주당 소개

## 외교·안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튼튼한 안보, 군의 사기 진작과 보훈 강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및 공공외교 추진, 한미동맹의 발전 및 주요 국가·지역과의 전략적 협력,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추진,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경제안보 외교

## 통일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 판문점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간 합의를 존중·계승하고 적극 이행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통일기반 조성,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경제 실현, 북한 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 과학기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연구여건 개선,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미래사회 변화 대비 및 디지털격차 해소, 개방형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역량 제고

## 기후·에너지·환경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달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사회 구현, 국민이 안전한 환경 구축과 생태계 회복, 공정한 전환과 에너지 분권, 남북 및 국제사회와의 환경협력 강화



# 더불어민주당 소개

## 복지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 사회안전망과 중앙-지방간 균형복지, 건강권 보장과 국가보건의료체제 확립,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의 권리 실현과 지원 강화, 활기찬 노년과 안정된 노후 보장, 장애인 자활지원과

## 교육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사교육 부담 없는 책임교육 실현, 대학 교육대전환과 국가균형발전 달성, 평생학습사회 실현, 공정한 교육의 실현, 상생 교육 실현과 민주시민교육 강화

## 성평등

성평등 민주주의 구현, 남녀 모두가 행복한 사회, 성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

## 문화·예술·체육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문화, 다양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 전통문화예술 보호와 국제문화교류 다원화

## 언론·미디어

언론의 자유 보장과 미디어 공적책무 강화, 미디어 이용자 권익 및 참여 강화, 상생하는 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미디어산업 지원 강화

# 연혁



**2022년 현재**

당대표 | 이재명, 원내대표 | 박홍근

최고위원 |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임선숙·서은숙

# 신입당원이 읽으면 도움이 되는 당원교과서 내용 일부 정리

- 정치적 논쟁에서 이기는 당원이 되려면
- 당원이 경계해야 할 7가지 악습
- 민주당을 지탱해 온 당내 문화 : 동지애

# 정치적 논쟁에서 이기는 당원이 되려면

## 1. 단순해질 것

정치적 주장은 단순하고 간명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설명이 필요한 주장을 하는 것은 지는 길이다’라는 격언이 있다. 하물며 장황하고 복잡하며 애매한 주장을 늘어놓는 것은 패배의 보증 수표다. 기억은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작용이기도 하다. 정파를 불문하고 역대 대통령들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고 간명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뇌리에 각인될 수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이 그것이다. 이는 정파를 불문하고 공통된 원칙이다.

## 2. 구체적으로 접근할 것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해서는 곤란하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핵심 요소 혹은 법칙성을 추출해 내는 추상화 능력은 학문이나 예술 영역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지나치게 추상화에 의존하다 보면 자칫 설득력에서 밀릴 수 있다. 이슈를 제기할 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상대방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당신의 경험과 결부시켜 이야기하라. 당신의 주장이 어째서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일깨워라.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채택하면 더 높은 봉급을 받을 수 있고, 더 안정되고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며, 갑질 횡포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라.

## 3. 틀(프레임)을 유리하게 설정할 것

“강아지도 자기 집에서는 반쯤 이기고 시작한다.”는 속담이 있다. 상대방을 이기려면 싸움의 틀을 잘 짜야 한다. 정치는 어차피 다툼이다. 다툼을 싫어하는 사람은 현실 정치의 격랑에서 버티기 어렵다. 다툼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을 나에게 익숙하고 유리한 마당으로 끌어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상 급식’을 생각해 보자. 무상 급식 반대론자들은 이 정책이 좌파적 발상이라며 반대 논리를 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상 급식이 우리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의 한 내용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반대론을 돌파할 수 있었다. 즉, 상대방이 ‘이념’이라는 틀을 들고 나올 때 우리는 ‘헌법’이라는 틀로 응전함으로써 이른바 ‘프레임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마침내 승리했던 것이다.



# 정치적 논쟁에서 이기는 당원이 되려면

## 4.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강조할 것

소극적 지지층이나 중간 지대의 부동층(swing voter)을 설득하려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행동하고 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민주당 논객 가운데 과격하거나 저속한 언행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반감을 주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함께 불만을 표현해 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당에 대한 당신의 충성심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상대방에게 심어 줄 수 있다. 상대방을 최종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함께 공유하는 가치관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매개로 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 5. 상대방 언행의 모순된 부분을 지적할 것

어떤 주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의 정직성과 언행일치의 자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바꿔 말하면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의 모순된 언행이나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 정치적 논쟁에서 승기를 잡는 데 효과적임을 뜻한다. 과거 대쪽 판사로 이름 높던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사람들은 평소 그의 청렴결백하고 단호한 이미지 때문에 더 크게 실망했다. 반면 각종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었던 이명박 후보는 유권자들이 처음부터 그의 도덕성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더 큰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무난히 당선될 수 있었다.

## 6. 확신감을 내뿜을 것

항상 당신의 확신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용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投射)하라. 당신의 적수들은 논쟁에서 당신이 흔들리고 있는지 확신에 차 있는지를 단박에 알아챈다. 신념에 차 있다는 것은 교만이나 격분과 구별된다. 진정으로 신념에 넘치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와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대중의 호감을 사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겸손함은 이성적인 신념이 뒷받침될 때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정치적 논쟁에서 이기는 당원이 되려면

정치인은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공유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방식도 대중의 가슴 속에 파고들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7. 상대방을 가르치려 들지 말 것

전통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일 때나,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학습 욕구가 높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그다지 존경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일방적인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며, 독선적인 ‘달변가’의 말을 곱게 들어주는 고역도 원치 않는다. 정치인은 성직자나 교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이크 앞에 서면 우쭐해져서 청중을 가르치려 든다. 마치 자신이 지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청중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지만 그런 환상에 빠지는 순간 청중은 등을 돌린다. 정치인들의 중대한 말실수는 대부분 국민을 훈계하려 할 때 나온다.

## 8. 상대방을 웃게 할 것

유머는 정치적 논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유머러스한 통찰력과 자신을 우스개로 낮출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의 적수를 무장 해제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만약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재능이 없다면 유머집에 나오는 이야기를 상황에 맞게 인용하는 것도 좋다. 유머 감각으로 정치적 논쟁을 반전시킨 사례로 링컨 대통령의 예를 들 수 있다.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 폐지 토론회에 참여한 링컨에게 상대방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 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링컨은 “나에게 또 다른 얼굴이 하나 더 있다면 지금 이 얼굴을 하고 다니겠는가?”라고 응답해 상황을 역전시켰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화내면 지는 것이고, 웃기면 이기는 것이다.

# 정치적 논쟁에서 이기는 당원이 되려면

## 9. 개방적 태도를 취할 것

“바보야, 문제는 예의범절이야!”

상대방을 공략하려 가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경청할 자세를 갖추고, 상대방의 요구 사항 가운데 한두 가지 정도는 들어줄 준비를 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실제로 반대자, 비판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심지어 명백히 틀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배울 점은 있는 법이며, 이를 통해서 당신의 전략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행정 중심 복합도시를 사실상 무산시키는 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할 때, 당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박근혜 의원과 친박 의원들을 설득하여 공동보조를 통해 부결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10.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선택할 것

정치적으로 완고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제압하거나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지나치게 에너지를 쏟지 말라. 불가능한 일이다. 설득이 가능한 중도 성향의 유권자를 타깃으로 삼아라. 이는 수백 년 동안 종교적 포교에 사용되어 온 전략이고 지금도 유용한 방법이다. 한국의 정치 지형은 완강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30%, 완강한 국민의힘 지지층 30%, 진보 성향 유권자 10% 그리고 상황에 따라지지 정당을 달리하는 30%의 중도층 유권자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에 의해 선거 결과는 뒤바뀐다.

# 당원이 경계해야 할 7가지 악습

## 1. 감정에 치우친다.

어떤 종류의 논쟁에서든 감정에 휩싸이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정치적 논쟁도 마찬가지다. 격분을 터뜨리는 것처럼 자기주장을 약화시키고 건강에 해로운 일도 없을 것이다. 토론장에서 상대방은 돌부처처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 채 앉아 있는데 당신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거나 머리에서 김이 나고 있다면, 당신은 지고 있는 것이다. 매순간 당신의 분노를 통제하고, 매사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 2. 교만하다.

신이 어떤 사람을 징계하고자 할 때 쓰는 수단이 바로, 그사람으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지나치게 무지몽매해 보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에도 당신은 그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기색을 절대로 내비쳐서는 안 된다. 만약 당신이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들거나 깔본다면 그들은 오히려 당신의 그러한 시도에 대항해 완강하게 버틸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켜 체하고 거만하며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 3. 욕설을 내뱉는다.

과격하고 날카로운 말처럼 나쁜 것은 없다. 당신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잔인하고 모욕적인 언어나 욕설, 터무니없이 선동적인 말투를 즉시 멈춰야 한다. 예를 들면 일반 시민을 향해서 함부로 ‘수꼴(수구꼴통)’, ‘일베(일간베스트)’라고 비난하는 것은 언젠가 민주당 당원이 될 수도 있는 시민들을 내쫓는 행위다. 각종 매체를 통해 유명해진 논객들 가운데는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설절을 통해 화려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현상이다. 자극적 언동은 열혈 지지자들에게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다수 일반 시민들로부터는 외면받을 우려가 있다. 정치적 마니아층들의 입맛에 맞는 폭력적 언어나 인격에 대한 조롱, 비아냥거림, 혐오 표현으로는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논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를 남발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당에 도움을 준 경우는 많지 않다.



# 당원이 경계해야 할 7가지 악습

## 4. 사실을 조작한다.

당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팩트(사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해도 억지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 내지 말라! 만약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그 사실이 점차 당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형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서 처벌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형량도 매우 무겁다. 예컨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형사범 가운데 매우 중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으로 징역(집행유예 포함)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된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 5. 부주의한 언행을 한다.

오얏(자두)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쓸데없이 오해 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사회적 이해관계와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정치 논쟁에서 목표와 동떨어지거나 상충되는 행동은 의도와 상관없이 자칫 엉뚱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1992년 제14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통일국민당 당직자는 여당에 의한 관권 선거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음식점에 도청기를 설치했다가 발각되었다. 부산 지역의 주요 기관장들이 모여 “선거에 지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우리가 남인가?”라며 관권 선거를 모의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이다. 그러나 당시 집권당인 민주자유당은 이 사건을 불법 도청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역공을 폈고, 그 결과 여당의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었다.

## 6. 음모론에 빠진다.

사회적으로 파문이 큰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종종 음모론에 현혹되곤 한다.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1979년 10.26사건에 미국 중앙정보국 (CIA)이 개입되었다거나 하는 주장이 그것이다. 한국전쟁이 대한민국에 의한 북침이라는 학설도 한때 유행했는데 이것은 음모론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 당원이 경계해야 할 7가지 악습

구소련의 기밀문서가 해제되면서 한국전쟁은 북한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남침이라는 것이 낱낱이 밝혀졌다. 음모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어느 전직 고위 공직자는 어떠한 정부도 음모론이 제기하는 정교한 시나리오를 실행할 수 있을 만큼 유능하지 않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유능한 당원은 검증되지 않은 허황된 음모론에 의존하지 않는다. 음모론을 동원하지 않고도 당의 노선과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 7. 해당 행위를 한다.

민주정당에서 내부 비판이나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내 비판과 해당 행위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건강한 당내 비판은 애당심과 당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공유를 전제로 한다. 반면 해당 행위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충족하거나 경쟁자를 모략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 발전이나 선거 승리에 역행하는 것이다.

당원이라고 항상 선하거나 옳은 것은 아니다. 당원들 중에도 부도덕하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동료가 불법행위를 자행하거나 부도덕한 사생활로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건강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한편 당의 노선 및 당론에 대한 비파이나 반대 의사의 개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노선과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활발한 민주적 토론이 필요하고 또 보장되어야 하지만,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사불란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정당은 친목회나 연구 모임이 아니라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명분 없는 분열은 치명적인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당 구성원이라면 동지들과 다투기 전에 먼저 경쟁 정당의 허점을 공략하는 것이 우선이다. 내부의 이견이나 갈등은 당내 절차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 민주당을 지탱해 온 당내 문화 : 동지애

## 민주당을 지탱해 온 당내 문화 : 동지애

민주당은 국내의 다른 정당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당내 문화가 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원들 사이의 강력한 ‘동지애(同志愛)’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장기간에 걸쳐 민주화 운동을 전개해 왔다. 수많은 당원들이 투옥되거나 고문을 당했으며, 권력의 횡포로 인하여 당 활동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탱할 수 있게 한 힘이 바로 당원들의 끈끈한 동지애였다. 고난과 공포를 함께 감당하면서 당원들 사이에서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동지애가 싹텄다.

엄혹한 시절 당을 위해 헌신하였으나 끝내 정권 교체를 맞이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동지들도 부지기수였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부터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에 이르기까지 반세기 동안 민주당은 야당의 대표 주자로 절대 권력에 맞서 싸워야 했다. 민주주의의 대의를 위해 헌신한 당원들의 사연을 책으로 쓴다면 다 읽을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민주당 당원들의 동지애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김대중 총재를 들 수 있다. 김대중 총재는 4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김대중 총재는 1971년 제7대 대선에서 95만 표 차이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아깝게 패배하고 1973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되어 살해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후 김대중 총재는 1987년 대선, 1992년 대선에서 연이어 패배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으나, 1997년 대선에서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총재는 자신의 측근들을 전국 각지에 보내, 오랜 세월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도 음으로 양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이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어떤 형태로든 보답할 방안을 찾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당시 김대중 총재가 이 같은 지시를 할 때 하나의 단서를 붙였다.

“만약 당사자 본인이 사망하여 보답할 길이 없을 경우에는 그이 자손에게라도 반드시 은혜를 갚으라.”

# 민주당을 지탱해 온 당내 문화 : 동지애

이것은 민주당 당원들의 동지애의 진수를 보여 주는 일화다. 당원 간의 동지애를 모르고서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고, 민주당을 알려면 반드시 당원 간의 동지애를 이해하여야 한다.

오늘날은 과거와 같은 뜨거운 동지애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정치 문화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고, 시대상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동지애가 반드시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동지애가 변질되면 폐쇄적 정실주의, 파벌 문화 등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으며 나아가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동지애라는 말을 쓸 때는 이러한 점들을 깊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건강한 동지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동지애의 부작용은 철저히 경계하되, 그 본연의 정신은 이어 가야 할 것이다.